

행정통합에 교육청도 합류…“교육, 통합의 완성”

광주·전남교육청, 자치권 보장 전제 공동발표문 채택
교직원 인사·재정 쟁점 속 교육행정 통합추진단 가동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공식 찬성 입장을 밝히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정치·행정 통합의 논의가 교육 영역으로까지 급속히 확장되는 형국이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은 12일 광주시교육청에서 회동을 갖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시·도 교육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교육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가치를 완성하는 초석이 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며 교육 자치 보장과 미래 인재 양성 등을 담은 4개 항의 공동발표문에 합의했다.

공동발표문에서 양 교육청은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사회를 주도하며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죽이 될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적극 찬성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현행 제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교육 자치 보장을 전제로 하겠다는 점을 분명

히 했다.

이는 교육통합 논의 과정에서 제기돼온 인사·조직 통합에 따른 불안과 교육자치 약화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도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교육청 기능 조정이나 통합 논의가 불가피한 만큼, 교원과 직원 인사 체계, 교육재정 배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통합 논의가 속도전에 치우칠 경우 교육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교원단체와 일부 교육 관계자들은 인사 이동 확대, 근무지 순환, 조직 축소 가능성 등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충분한 공론화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와 교육지원청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면 점도 주요 우려로 꼽힌다.

반면 교육통합을 통해 광주·전남이 공동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 인프라와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농산어촌과 도심 간 교육격차 완화, 광



12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광주시교육청-전남도교육청 간담회에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역 단위 공동 교육과정 운영, 지역 특성을 살린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등은 통합 교육 행정의 긍정적 효과로 거론된다.

양 교육청은 이 같은 쟁점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추진

단은 교육통합의 범위와 방식, 단계적 추진 방안 등을 중심으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통합의 청사진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과 함께 교육통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오늘의 자리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교육가족과 교육 구성원들이 인사상 불안 없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김대중 교육감은 “아이들의 미래와 희

망을 위해 통합을 통한 대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광주와 전남은 본래 하나의 뿌리인 만큼, 더 큰 광주·전남이 아이들에게 더 행복한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는 희망을 함께 키워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전남도, 문화체육관광부 ‘K-POP 공연’ 최다 선정

전국 5곳 중 여수·장흥 2개소…국비 5억6000만원 확보

전남도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K-POP 공연 공모사업에 전국 최다 선정의 성과를 올렸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문체부 주관 ‘2026 대형 한류종합행사(K-POP 공연)’ 공모사업에 여수시와 장흥군이 선정, 국비 5억6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자체의 K-POP 등 대형한류 행사를 통해 한류 콘텐츠의 다양성과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는 것으로, 전국에

서 선정된 5개 지자체 중 전남이 두 곳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여수시의 경우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사전 불 조성 전략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봄업 D-50 K-POP 콘서트와 글로벌 디지털 응봉합 아날로그 콘서트, 낭만 버스킹 in 여수 등 관광 연계 프로그램을 포함한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사업계획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민관 협력 체계,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결합한 차별화된 종합행사 모델

콘텐츠 운영계획을 통해 지역 관광 경쟁력을 강화와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이 전년도에 이어 올해 다시 선정되는 평가를 이뤘다.

장흥군은 여름 성수기 물축제 기간(7월 25일~8월 2일) 와 연계한 K-POP 콘서트와 지역 대표 관광자원인 옛 장흥고교소에서 K-드라마 in Prison(빼빼옹 zip) 프로그램을 운영해 여름 휴가기간 중 관광객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특히 18회 이상 물축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축제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대표 여름축제인 정남진 장흥물축제와 한류

을 제시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 체계적인 실행계획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이번 대형 한류행사 공모에서 전남이 유일하게 2개 지자체가 선정된 것은 전남 관광콘텐츠의 경쟁력과 추진 역량을 동시에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다”며 “앞으로도 대형 메가 이벤트 유치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관광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민주, 공관위 설치…지방선거체제 본격 전환

위원장 김이수·재심위원장은 김정호 의원 임명



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와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재심위)를 설치하는 등 선거 체제로 본격 전환했다.

당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고 회의 후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전했다.

공관위 위원장에서 김이수 전 현법 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임명됐다.

김 전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를 지냈고, 현재 조선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됐고, 이수진·모경종 의원,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 김한나 총신대 교수,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 위원장 등 8명이 공관위원으로 참여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관위는 당·당구에 따라 20명 안팎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며 “정정대표는 의결 대비 해 훌수로 하는 게 좋겠다”면서 추가

구성 가능성도 함께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재심위는 경남 김해시를 3선인 김정호 의원이 위원장이 맡았다.

최기상·권향엽 의원이 부위원장에 임명됐고, 위원엔 임오경·전진숙 의원, 오도환·조은경 변호사, 오영균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정혜영 변호사 등이 선임됐다.

당·당구에 규정된 재심위 위원 수는 15명이다. 정 대표는 1명을 추가해 훌수로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김한나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장장을 당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1면 ‘광주전남 통합’서 계속

TF는 신수정 의장이 단장을 맡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역 안배를 고려해 2명씩 위원을 추천받아 구성될 예정이다. TF는 행정통합 주요 의제 연구와 통합 의회 구성 방안 검토, 행정통합 특별법안 분석·대응 등을 담당한다. 시의회는 정책 토론회와 타운홀 미팅 등 공론화 절차도 병행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의회 역시 13일 오후 김영록 지사와 간부 공무원,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추진 절차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앙 정치권의 응집임도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행정통합 지원을 위한 당내 기구를 발족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광주·전남 통합 추진 특별위원회와 행정통합 입법 추진 지원단 구성을 공식화했다. 통합 추진 특위는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과 김원이 전남도당 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으며, 한정아 정책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입법 추진 지원단은 국회 교육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법안 조율을 나설 계획이다.

시·도 관계자는 “특별법 조안 작성과 입법 공청회 등 주요 의사 결정이 이번 주에 집중돼 있다”며 “지역에 최대한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12·29 항공기 둔덕 충돌 평균속도 232km/h”

정준호, 항철위 ‘참사 항공기 속도·충돌가속도’ 분석 공개

12·29 사고 항공기가 둔덕 충돌 당시 평균 속도가 232km/h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기 잠수 조작 특수에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충돌 가속도 검토’ 분석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의 평균 속도는 △동체작동 지점(a지점) 374km/h △활주 미찰시작 지점(s지점) 374km/h △이후 b지점 324km/h △충돌 직전 지점(e지점) 280km/h. △충돌 지점(c지점) 232km/h로 분석됐다.

도의회, 순천 신대·선월 개발이익 환수 해법 모색

공공개발 이익 귀속 구조 점검

전남도의회가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개발이익의 환수 해법 마련에 나선다. 전남도의회 산하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전남도 동부청사 이순신강당에

지점별 시각은, 동체작동 시점인 a지점은 0초라고 할 때 S지점 약 15초, b지점 20초 직후, e지점 25초 직후, c지점 30초 직전이다.

항철위가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속도를 분석한 결과 사고기와 동체 작동한 뒤 30초 후 로컬라이저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또 case-1 평가를 통해 충돌 당시 인체에 가해지는 가속도는 최소 20G (Gravity·중력 속도 단위) 이상 수준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면의 유료 질량과 기체의 질량 비율을 0.5 이상으로 가정했고, 충돌 지속 시간을 최대 0.1초로 적용한 결과다.

case-2 평가에서는 충돌 직전 인체에 가해지는 가속도는 40G~60G 수준으로 예측된다. 이는 충돌 직전의 속도와 직후의 속도 비율이 0.1~0.4 수준에서 충돌 지속시간을 0.1초로 가정한 결과다.

정준호 의원은 “지료의 해석은 전문가의 영역이고 사고원인도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사고 당시 충돌 속도와 가속도 분석자료를 확보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일부 내용을 객관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 “국정조사와 추후 종합화되는 결과는 물론, 정부와 협의해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개된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순천시의원 등이 참여해 △신대·선월지구 개발사업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 △개발이익의 환수 제도의 현황과 운영 사례 △개발이익의 실질적 지역 환원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서동욱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개발이익 환수의 원칙을 재정립하고 도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정한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시민사회단체, 관계 공무원,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도는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전남도가 2021년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 부부로, 신청일 직전까지 전남에 6개 월 이상 주소를 둬야 한다. 혼인신고 후 6개 월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5일에 받을 수 있다.

결혼축하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남 아동복지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청년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이면 신청 기간을 기존 ‘혼인신고’ 일’ 현재 1년 6개월 이내에서 ‘결혼비자 발급일’ 현재 1년 6개월 이내로 변경했다. 결혼비자 발급까지의 기간과 실질적 혼인 생활 개시 기간의 격차를 줄여 결혼 초기 외국인 배우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다문화 가구의 지역사회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 마련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외에도 출생기본소득, 청년문화복지카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운영 등 청년층 인구유입과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이 전남에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살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